

독자권익위원칼럼

김윤자

독자권익위원
농협 광주본부 경영기획단장



우리나라의 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농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우리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은 물론 국가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다양한 대체 곡물의 등장으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협은 우리 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은 우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러 활동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농협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쌀의 우수성을 배우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쌀 맛있는 탐험대', '농촌에서 놀자' 프로그램은 다양한 농촌체험을 직접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쌀을 만지고 요리하며 우리 쌀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에 그치지 않고 놀이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며, 학부모들에게도 우리 쌀의 영양학적 가치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우리 쌀 소비 활성화 위한 농협의 역할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활동은 어린 세대에게 우리 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쌀 소비 감소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종원, 기안84와 협업해 제작한 '백종원의 초간단 밥도둑', '농부왕 기안84'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쌀을 활용한 요리 소개와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유쾌하게 농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젊은 층에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식품이나 간편식(HMR) 형태로 우리 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젊은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쌀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쌀 소비를 재구성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농협은 지역사회와 학교 급식 관계자들과 협력해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을 공급하고 급식 메뉴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쌀 소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학교 급식에서 우리 쌀 중심의 건강한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 쌀에 대한 친밀감을 키워주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해 단체급식에서도 우리 쌀 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패턴에 맞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농협은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소

비자들이 손쉽게 우리 쌀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석밥, 쌀국수, 떡 등 다양한 제품군이 개발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하며 한국산 고품질 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농협은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도'를 홍보하며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저탄소 인증쌀의 소비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더불어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우리 쌀 중심의 요리 경연대회나 체험 부스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간다.

농협이 최근 실시한 '쌀맛나는 2025' 운동은 이러한 노력을 대표하는 사례다. 이 운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몰에서 백미 구매 고객에게 할인 쿠폰과 경품 혜택을 제공하며, 아침밥 먹기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이 운동을 통해 얻어진 일부 매출액은 결식아동 후원 기금으로 조성되며,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농협은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친환경 생산 확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산 고품질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을 약속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최광일

전남도 친환경관리팀장



우리가 매일 먹는 쌀 한 톨이 농촌의 생태계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 중심에 바로 '친환경 벼 확대 재배'가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었고, 그 영향은 농업 분야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벼농사는 생육 시기 전반에 걸쳐 기온과 날씨 등에 민감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작물 중 하나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확대나 기계화 중심의 대응을 넘어, 농업 구조 자체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친환경 벼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시 화학비료를 권장 시비량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기 벼 재배는 논 생태계 내 미생물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 흡수와 농업용수 절감, 생태계 복원 등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을 통해 쌀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벼 확대 재배가 답이다

생산 과잉해소와 쌀값 하락 등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방향에서는 친환경 쌀 재배 확대를 통해 건강한 식탁, 지속가능한 농업,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친환경 쌀은 10a(300평) 당 일반 관행 쌀보다 생산비가 다소 높고, 관행농업(523kg) 대비 생산량이 낮지만(457kg), 공공급식, 학교급식 등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공공비축미 전량 매입 및 수매가 인상, 직불금 단기 인상 등 농가 입장에서 소득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친환경쌀로의 전환은 단순히 면적을 조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고부가가치화하고, 동시에 수급 조절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노동 집약적이고, 재배 농법에 대한 농부의 손길과 안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유기농 전환 초기에는 수량 감소와 판로 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도 크다.

이 때문에 생산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단지조성, 유기농업자재 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확충, 공공급식 연계 소비처 확보 등 실질적이고 맞춤형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생산자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소비자의 선택이 바뀌어야 시장이 변하고, 시장이 변

해야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

가까운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 매장에서 유기농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넘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천의 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직불금 단기인상, 저탄소농업 인증비 지원, 녹색제품 구매법에서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추가하고, 탄소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기지로,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쌀 수급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남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모델은 향후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 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환경 벼 재배 확대다.

친환경농업 확산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시대의 요청이다. 탄소중립 사회는 산업과 에너지뿐 아니라, 우리 밥상의 변화, 농촌의 전환에서부터 완성된다.

탄소를 줄이고, 생명을 지키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선택. 그 시작은 친환경농업이다.

취재수첩

5월 전남서 힐링을

이현규

정치부 부장대우



물빛이 더 깊어지는 계절, 전남의 5월은 걷기만 해도 마음이 느슨해진다. 초록은 더 짙어지고, 바다는 부드럽게 보인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짧지만 확실한 쉼표가 필요하다면 '전남'이 제격이다.

전남도는 올해 5월을 '전남 방문의 달'로 정하고 여행객 맞이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정과 실용이 교차하는 5월의 전남은, 힐링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여행지다.

전남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준비한 '비3 할인'은 여행 부담을 덜어준다. 전남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숙박비를 최대 5만 원까지 할인하고, 체험형 관광상품이나 워크케이션 숙박시설·공유오피스 이용료 역시 반값에 제공한다. 여기에 전남 시랑에 서포터즈 회원에게는 1박 당 1만 원의 추가 할인이 적용돼, 실속 있는 여행을 기대해볼 만하다.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과 전남블루 워크케이션 누리집(jnworkation.kr)을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불거리도 풍성하다. 5월 한 달 동안 전남 시군 곳곳에서는 21개의 축제가 열려 지역의 색을 더한다. 목포는 근대역사관 등 관광시설의 입장료를 절반으로 낮췄고, 여수는 아쿠아플라넷에서 다자녀 가정에 30% 할인을 제공한다. 순천은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통합입장권

을 단체에 한해 40% 할인하고, 나주는 연산포 흥여거리에서 흥여를 반값에, 한우는 30% 할인 판매한다.

장흥은 우드랜드와 천문과학관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영광·장성·완도는 관내 숙박, 식당, 카페, 특산물 구매 시 여행객비를 지원한다. 단순한 가격 혜택을 넘어, 지역의 매력을 보다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배려다.

전남의 관광 콘텐츠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다.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금·토요일에 여수에서 출항하는 크루즈는 1박 2일 동안 금오도, 거문도, 백도 등 다도해 섬들을 누비며 여행과 휴식을 동시에 선사한다.

전남은 더 이상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다. 지역마다 제 색을 가진 콘텐츠가 여행의 이유가 되고, 계절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바다를 품은 마을, 숲을 닮은 도시들, 그리고 느린 걸음마저 허락하는 여유. 이 모든 것들이 5월의 전남을 여행하고 싶은 곳으로 만든다.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올해의 여행은 전남에서 시작해도 좋겠다.

OPINION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사설

사법부 더 이상 정치혼란 부추겨선 안된다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선거에 국민의 표심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 최대변수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대법원의 선고가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이뤄진 데 이어 파기환송심 절차 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나 서울고등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이례적인 데다 다가올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물론 대법원이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심리했다는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이 나오는데는 대법원에서 평균 92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 사건만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조 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그날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이를 뒤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표결까지 마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고법 재판부도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파기환송심을 선고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법부의 움직임으로 인해 유력 대선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 나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후보나 그 지지층이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만약 하나 대통령선거에 나가지 못할 경우 그 혼란은 가히 상상이상일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에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한다.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더 이상 정치혼란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수 '산업위기 지역'...미래 도약 계기 돼야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최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시를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산업 위기로 인한 선제대응 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석유화학산업 악화로 인한 여수지역 산업구조가 붕괴 우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실 여수국가산단은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남도의 34.6%를 차지하며 국내 석유화학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 전남도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석유를 정제해 얻어지는 나프타를 고온에서 분해해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여수산단내 NCC기업들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규제강화 등으로 부진에 빠졌다.

가동률이 지난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감소했고, 생산액도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대기업의 대정부 등 공사 발주액은 지난 2022년 2조 145억원에서 지난해 1조1195억원으로 무려 44.4%나 줄었고 협력업체인 플랜트 기업들의 노동자 수도 지난해 9월 8735명 수준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무려 80%나 감소했다.

당연히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여수시 국제정주액은 2024년 551억원으로 2023년 대비 67% 줄었고 지방소득세 역시 49% 감소한 1175억원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여수시 석유화학기업들은 앞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혜택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쳐진다.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결정이 불황에 빠진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생태계를 회복하고 미래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를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열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